

# 성공적인 녹색 성장을 바라며

글 | 최경희 \_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khchoi@ewha.ac.kr

**최** 근 녹색 성장, 녹색 뉴딜, 녹색 정책 등 ‘녹색’이라는 말이 여러 분야의 용어와 결합되어 새로운 합성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관련 용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녹색 관련 정책과 사업이 발표되고 있다.

다양한 녹색 용어 중에서 ‘녹색 성장’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성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는 글로벌 이슈인 기후 변화와 맞물려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녹색 성장은 2000년 1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이후 UN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사회에서 녹색 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 주요 선진국, 녹색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 분주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 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의하면서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연결하여 정부는 새해 들어 녹색 성장에 일자리를 결합한 ‘녹색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 뉴딜은 자연 환경을 포함하여, 가정, 학교, 기업, 공공기관까지도 친환경화하겠다는 정책이다. 1월

6일 발표된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그린카를 주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2012년까지 50조 원이 투입되며, 총 9대 핵심 사업을 통해 9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이중 4대 강 살리기에는 약 27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녹색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며, 이 외 산림 바이오 에너지, 녹색 교통망 구축, 그린 홈 건설과 공급, 자원 재활용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녹색 뉴딜 추진 방안이 발표된지 일주일 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정부는 신성장 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였고 3대 분야 신성장 동력을 확정했다. 확정된 신성장 동력은 녹색 기술 산업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그린 도시 등 6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녹색 기술 부문에 연간 9천억 원에 불과했던 투자비율을 2012년까지 연간 2조 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녹색 기술 연구개발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주요 선진국도 녹색 성장을 위한 대책과 지원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환경상에게 ‘일본판 그린 뉴딜 구상’을 본격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일본도 녹색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녹색 뉴딜 정책은 환경 비즈니스 시장을 2015년까지 약 100조 엔(약 1천450조 원)으로 키움으로써, 에너지 절약 제품을 보급하고 새로운 친환경 수요를 창출하여 녹색 성장 사회구조를 정착시켰겠다는 것이다. 일본

환경성은 환경 분야 투자 기업에 대해 무이자 용자 제도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에너지 절약 제품과 전기자동차 등의 구입을 장려할 계획임을 밝혔다.

프랑스도 녹색 뉴딜로 경제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마련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 산업에 4천억 유로(약 740조 원)를 투자하여 그린 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안 104건을 이미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프랑스 환경정책의 핵심은 에너지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절약하겠다는 것이며, 에너지 절약 시설 개발 및 확대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저에너지 건물 신축 지원, 저에너지 주택구입 자금 보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높이기 공사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2020년까지 무려 1천45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철로와 에너지 절약 시설물 설치 등 친환경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업체가 수만 명을 충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카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녹색성장 실천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기대

그런데 일본, 프랑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녹색 뉴딜 정책의 실행에서 걱정되는 몇 가지가 있다. 일본은 2005년 발효된 '교토 의정서' 채택에 앞장서면서 이미 녹색 전략을 산업과 연계해 왔다. 후쿠다 전 총리가 환경입국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아시아 경제 환경공동체 구상을 발표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의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발국으로 녹색 정책의 노하우와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미국은 오일쇼크 때부터 쌓아온 에너지 절약 경험과 첨단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이들 나라의 녹색 정책은 오랫동안 준비되었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집을 그린 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는 녹색 뉴딜을 발표하면서 가칭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도 없다. 현재 우리 국회상황을 보면 녹색 정책을 뒷받침해줄 법이 언제 제정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녹색 뉴딜을 통해 4년 동안 9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는데, 일자리 개수도 그렇지만 일자리 종류도 안정적이지 못한 듯하다. 4대 강 주변정비 사업만 보더라도 대부분 재해위험지구정비, 강주변의 쓰레기 처리 등 주로 청소관련 일자리가 대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볼 때, 이러한 일자리도 감지덕지하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일시적인 단순노무직이라면 진정한 고용 창출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에너지 전문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예정인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독일, 일본 등이 우리보다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따라잡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나 청정에너지 산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기대했는데, 그렇다면 기업이야말로 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사실 에너지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다. 이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타입' 지가 신년호에서 에너지 절약을 '제5의 에너지'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정에너지 개발과 보급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도 큰돈을 모을 수 있다. 정부는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지 말고 돈 적게 들고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간접 고용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몇 가지 우려와 함께 SWOT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번 녹색 성장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 각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정부는 녹색 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기업은 고효율성의 친환경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NGO는 녹색 성장의 촉진자이자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가정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각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녹색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㉔



글쓴이는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학생처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등을 지냈다.